이전 지원책·지역 발전 기대감 속 소음피해 우려 여전

무안서 '광주 군공항 주민설명회'

500여명 참석…1시간 넘게 질문 쇄도

피해보상·생계유지 방안 등 요구 많아

"月 6만원 보상금 용납 불가" 비판도

국방부 "정부 믿고 지켜봐달라" 당부

광주 군공항 주민 설명회가 1일 오후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가운데 무안군민과 국방부·전남도·광주시 관계자들 사이에 질의응답이 이뤄지고 있다. /조영권 기자

국방부가 1일 무안군을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하는 데 앞서 개최한 '광주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에서는 이전지역 지원책, 지역 발전 기대 등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무안군민들의 질의가 쏟아져 과거와 달라진 여론을 체감케 했다. 다만, 소음 피해, 지역 발전 저해 등 군공항 이전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우려 또한 여전했다.

국방부 주관으로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군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는 국방부가 참석 예측 인원을 토대로 마련한 설명 자료 300부가 행사 시작 전 동이 나는 등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에선 ▲군공항 이전사업 절차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부 차원 지원사업 등 군공항 이전 관련 핵심 현안이 다뤄졌다.

예정된 30분을 3배 가까이 넘겨 1시간20분 가량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소음 대책과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주민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질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주민 A씨는 "지역 발전과 국가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군공항은 국가 자산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 삶과 맞닿아 있는 만큼 사업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피해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광주시 군공항건설단장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 피해에 공정한 보상은 당연하며 토지 감정 평가 등도 주민 참여로 진행된다"며 "개발 이익은 전적으로 이전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쓰게 돼 있으며 모든 절차를 주민 참여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주민 B씨도 "군공항이 오면 지금까지 짓던 농사를 포기하고 떠나야 하지만 보상금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방법이 없다"며 "전남도와 무안군은 이주민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김 단장은 "도시계획을 수립해 이주민 생계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우선 공급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주민들이 원활하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귀농인이라고 밝힌 한 주민은 "공항 이전을 계기로 의료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생활 피해 우려 또한 제기됐다.

현경면에 거주하는 한 여성 농민은 "농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 왔다"며 "군공항이 들어서면 월 6만원의 소음 보상금을 준다는 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목숨 걸고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군민들도 "광주는 아파트숲이 있어 소음 저감이 되나 무안은 뻥 뚫려 소음에 곧장 노출된다", "군공항 소음으로 지역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박승홍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군공항 부지 만을 매입하던 그동안의 군공항 설계와 달리 새롭게 건설하는 군공항은 소음완충지역을 상당 부분 추가 매입, 소음 피해 저감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주거환경 개선 등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단장은 "국가 정책지원 사업으로 군공항 이전이 마이너스가 아닌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며 "정부를 믿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양시원 기자

'전남관광플랫폼' 숙박·체험 통합결제 편리해진다

예약 시스템 전면 개편한 앱 오픈

관외거주 숙박 최대 5만5천원 할인

6월 대표관광지 티켓 '1+1 이벤트'

전남도가 1일 디자인과 예약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앱을 오픈하고 이와 연계해 혜택을 강화한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를 추진한다.

앱 리뉴얼은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한 여행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메인 화면이다. 직관적 화면 디자인으로 가독성을 높여 관광객이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도 간편 방식을 도입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구글 로그인 방식도 채택했다.

앱 구동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앱 로딩이나 페이지 전환 속도를 크게 단축시킴으로써 대기 시간을 최소화했다.

이 밖에도 지도 최적화, 리뷰 개선, 검색 고도화, 추천 코스 개선, 숙박·체험 상품 통합 결제 시스템 간소화 등으로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게 여행 일정을 준비하도록 최적화했다.

올해는 전남 여행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남도와 광주시 외 주소지를 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숙박 결제 금액에 따라 ▲10만원 이상은 4만원 ▲7만원 이상은 3만원 ▲5만원 이상은 2만원을 기본 할인한다. 여기에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회원에게는 추가 할인액을 올해부터 1만5천원으로 상향, 서포터즈 회원은 1박당 최대 5만5천원 파격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6월부터는 체험·관람 상품 할인을 통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여수 요트 투어, 담양 죽녹원 등 전남 대표 관광지의 티켓을 1매 구매 시 1매를 추가로 증정하는 '1+1 이벤트'를 전남관광플랫폼을 통해 단독 진행한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청소년 바른일터 사업장 모집

광주시는 1일 "청년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바른일터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6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광주지역 사업장 가운데 기초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 인권을 존중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해 지원·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바른일터는 4월1일부터 11월6일까지 상시 접수하며 참여 희망 사업장은 광주시노동권익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적정 근로시간 준수, 인권침해 금지, 연소근로자(18세 미만) 보호 규정 준수 등 서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서약에 참여한 사업장 중 실제 청년·청소년을 고용하고 있으며 서약 인증 절차를 거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바른일터 인증사업장'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상하수도요금 일부 지원과 종량제봉투 제공, 인증마크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변은진 기자

전남 경로당 공기질 안전진단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1일 "어르신 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경로당 실내 공기질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시·군별 2개소씩 44개소를 선정,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실내 공기질을 측정·평가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이용자가 10인 이상인 시설을 우선 선정했다.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 라돈 등이다. 경로당 운영 과정의 환경 관리 애로사항도 함께 조사한다.

여름철 에어컨 관리 요령과 환기 방법 등 실내 공기질 개선 안내 수칙을 배포하고 탄소중립 실천 교육도 실시한다.

기준 초과 시설은 정밀검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관할 행정기관과 공유해 실질적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